

## 회 의 록

회의명		2023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3. 8. 4.(금) 10:30 ~ 12:00				
장 소		대학본부 별관 1층 CNU Hall				
심의안건		[제7호]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호선 [제8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기타안건: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				
심의결과		[제7호] 000 의원 선출 [제8호] 원안 수용 기타안건: 8. 31.까지 직능단체별 의견 합의 제안				
참 석 현 황	참석 대상자	22명	위임 내역	위임장 제출: 2명 안선민, 이유진	참석자	참석자: 20명 강석구, 최인호, 서연주, 노수림, 이왕록, 이병채, 김운용, 김수일, 최호정, 김 담, 노현주, 조성범, 김태섭, 김지수, 윤난희, 이재훈, 김필형, 최인용, 김채현, 전득수
	참석자	22명				
	불참자	0명	불참 내역			
주요 발언내용						
<div>■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재적위원 22명 중 위임 2명 포함 22명 참석.</div> <div>■ (전차회의록 검토 및 확인) 2023년 제3차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div> <div>■ 의안 제7호</div> <div>○ 의장(○○○): 제7호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호선 진행하겠음.</div> <div>○ 의원(○○○): ○○○ 의원 추천.</div> <div>○ 의장(○○○):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함.</div> <div>■ 의안 제8호</div> <div>○ 의장(○○○): 제8호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심의하겠음.</div> <div>○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따라, 제8호 안건 제안 설명.</div> <div>○ 의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로 대체함에서 별표가 무엇인지?</div>						

- 교무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규정도 개정해야 되는데, 별도의 개정 조치가 필요 없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함.
- 의원(○○○): 제12조(부속시설 등)가 총장 직속 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내 모든 기관이 해당되는 것인지?
- 교무과장(○○○): 학내 부속시설 등에 총장 직속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총장 직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의원(○○○): 제12조 제2항에 “각각의 장은 관련 대학, 전문대학원, 학과 및 학부의 장으로”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언급함.
- 교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 제시하면, 법령에 부합한 지 검토하겠음.
- 의원(○○○): 각 부속시설에는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장을 뽑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학칙 문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장(○○○): 학칙에는 총괄적인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장을 뽑는 것과 관련된 해당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을 수정해야 함.
- 교무과장(○○○): ○○○ 의원이 언급한 제1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서 단과대학 부속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나 학장이 하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이 학칙 조항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함.
- 의원(○○○): 제12조 제2항에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되어있는데, 학칙 [별표3] 부속 시설 등에는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와 모빌리티ICT사업본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무과장(○○○): 총장직속 시설 장만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직위들을 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보한다는 뜻임. 학칙 [별표3]은 시설의 소속을 명시한 것임.
- 의원(○○○): 그러면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와 모빌리티ICT사업본부를 부속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개정안에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에서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은 빼야하는 것이

아닌지?

- 의원(○○○): 제12조 제5항을 보면, 총괄운영센터에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사업 본부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를 두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안전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다음에 논의할 것을 제안.
- 의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통과시키고,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 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개정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수정 검토 후 안전으로 올릴 것을 제안
- 교무과장(○○○): 형식은 맞지 않지만, 직종을 명시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의 장을 따로 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 사업본부장 및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을 교수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10조 제2항에 다 들어가 있음. 안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은 통과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검토 후 별도로 개정 수요가 있을 때 안전으로 올리겠음.
- 의원(○○○): 시간제 등록생이 무엇인지?
- 교무과장(○○○): 대학을 다니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운영 중임. 이 개정안은 시간제 등록생이 소단위 전공과정을 들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임.
- 의장(○○○): 제8호 안전 충남대학교 일부 개정 학칙(안)은 원안대로 수용되었음을 선언함.

#### ■ 기타논의사항

- 의장(○○○):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음.
-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따라, 기타안전 제안 설명.
- 의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규정 개정 의무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질의응답 및 법적 자문을 받음. 8. 31.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함. 오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학무회의에서 절차가 끝날 수도 있음. 교수회는 다섯 가지 안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주었음. 직능단체별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안)에 대한 제안 배경 설명 필요.

- 의원(○○○): 학생들의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임. 기존 안의 학생 2명이 총 학생 2만 명을 대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 외부 인사와 학생 인원이 같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의원(○○○): 조교 사이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투표 반영 비율 관련하여 무기력함, 무용론이 있었음.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기존보다 진보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음. 조교협의회에서 제시한 안이 관철되면 좋겠으나, 더 나은 대의를 위하여 협조해서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겠음.
- 의장(○○○): 총학생회와 조교협의회는 안이 합의되면 따르겠는지? 조정의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임.
- 의원(○○○): 따르겠음.
- 의원(○○○): 합의된 것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합의 후 불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었음. 합의된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음.
- 의원(○○○): 직원협의회는 당초에 특정 직군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교원을 53%로 제안함.
- 의장(○○○): 직원협의회 특이한 점은 직원의 수를 늘리지 않았음. 교원의 수를 학생, 조교 인원으로 주는 안을 제안했음. 직원은 세 개의 직능단체가 있음. 세 개의 직능단체가 상호 간의 협의가 가능한지?
- 의원(○○○): 교수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 자료와 같은 안을 제안하였음. 그 근거로는 어제 보낸 메일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각 대학의 규정 개정 시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통상적으로 총추위는 선거관리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발대와 전북대는 총추위가 투표 반영 비율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례적으로 구성되었음. 전체 위원 수 대비 교원의 비율에 주목을 많이 하나, 내부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원과 비교원의 비율이 중요함. 대부분 학교의 총추위 교원 비율이 2배가 넘음. 심지어 종전과 같이 비율을 유지하는 곳도 있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외부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교수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음. 우리 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대학평의원회 절반이 교원이 아닌데, 우리 학교는 특별하게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의 2/3로 되어 있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수회에서는

1안, 2안을 제시하였음. 충북대의 경우 13:6인데, 외부인사 1명을 교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6임. 교수회가 제안한 15:7, 17:8은 그 비율보다도 낮음. 공주대의 경우 14:8로 비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지만, 외부인사를 교수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음. 실질적으로 15:8임.

○ 의원(○○○): 총추위 구성 비율 결정 전에 총추위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총추위는 선거관리를 위한 것인데 해본 결과, 선거관리와 중간에 필요한 사항들 결정,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서 작성하는 것임. 직전 선거에서 교수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분담 작성이 가능하였음. 학생들이 어떻게 선거관리에서 의견을 제시 하냐는 평가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텐데, 백서를 작성 하고 보통 다음 선거가 되어야 이것을 찾음. 책임질만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임.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추위 기능 자체를 고려해야 함.

○ 의장(○○○): 총추위 구성 비율과 투표 반영 비율은 연동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결과적으로 60%에서 53%의 차이인데, 한 명 증가의 편차 차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제안함. 서로 같이 만나서 협의가 돼서 하나가 되는 방법도 중요함.

○ 의원(○○○): 직원협의회는 공무원 노조 조합, 대학 노조 조합원, 과장급 이상이 포함되어있는 단체로, 직원협의회가 잘못 판단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직원협의회도 탈퇴할 수 있음. 1차 회의 때, 직원협의회, 공무원 노조, 대학 노조는 특정집단이 50%를 넘으면 안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2차 회의 때 교수회는 1안과 2안이 마지노선이고,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하다고 하였음. 학생과 직원이 합의하면 그때 합의를 다시 해보자고 하며, 회의장을 나갔음. 3차 회의 때 직능단체별로 다시 안을 제공하였으나, 교수회는 마지노선이라며 합의는 없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갔음. 그래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왔음. 이 헌법의 가치대로라면 교원, 직원, 학생이 합의된 방식이 아니라, 교원과 비교원의 합의된 방식으로 나눈다는 느낌을 받았음. 공무원 노조에서도 최대한 60%, 전북대학교에서 제시한 50% 그 제안을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고, 끝까지 합의하기 위하여 그 회의실 안에서도 끝까지 있었지만, 교원, 비교원을 나누는 방식의 형태로 교수회에서 그 자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회의자료와 같은 제안을 했음.

○ 의장(○○○): 직능단체별로 권리와 책임과 의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안을 제시

하겠으나, 실제로 정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충남대학교 총장을 뽑는 일임. 구성원으로서 감정을 내려놓고, 회의하자고 제안함.

- 의원(○○○): 대학 노조는 대학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대학회계직, 대학 상용직, 대학공무직 520여명 정도 가입되어있는 노동조합임. 공무원 노조는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되어있고, 직원협의회는 공무원 노조 구성원과 5급이상 사무국장까지 모두 가입 대상임. 또한 대학노조 중 대학공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도 직원협의회 가입 대상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제6조의 총추위는 행정적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직원이나 조교 비율이 많아야 행정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학생은 백서 작성 때 학교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끝까지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교수, 직원, 조교를 주로 구성 비율에 반영했음.
- 의장(○○○): 8. 31.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할 것임. 직원, 학생, 조교가 먼저 만나서 합의하고, 교수회와 또 만나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직능단체별로 다음주까지 개별적인 미팅을 제안. 총추위 인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교수회 추천도 랜덤으로 하는 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직원 추천에 대한 것도 실효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또 논의하게 됨.
- 의원(○○○): 총추위 선정 방식이 우리 학교는 무작위 추첨인데, 다른 학교의 경우 무작위 추첨 사례가 많지 않음. 직능단체별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의원(○○○): 직원들의 의견과 공무직의 의견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원협의회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왜 직능단체별로 의견을 따로 제안하는지?
- 의원(○○○): 직원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공무직의 경우 학교 직원으로 편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회칙상 그렇게 정해져 있음.
- 의원(○○○): 회칙을 바꿔야 함.
- 의원(○○○): 그것은 우리의 자치권임. 공무직의 경우 과거에 용역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용역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따로 있었음. 대학직원으로 전환 되면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형성됨.
- 의원(○○○): 직원 내에서 직능단체별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음.
- 의원(○○○):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임. 지난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분명히 비밀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에서 보낸 메일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했음. 교수회의 사과와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메일을 보낼 것을 요청함.

- 의원(○○○): 허위사실이 아님. 전체 20명 참석하였고, 참석 교수 9명 중, 교수회 임원 6명, 단과대 추천 1명은 저를 뽑았음. 의장 선출이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안정을 위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음.
- 의원(○○○): 문제 제기는 본인의 권리지만, 비밀투표를 해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을 임의로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폐회